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December
Vol. 48

12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툏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월간 「나라재정」 독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이 거의 '원통'처럼 활약한 한 해였고,
재난지원금에서 재정준칙까지 온갖 재정담론이 분출한 1년이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재정 잡지로는 유일한 「나라재정」도
위기대응 재정정책, 나라살림 현황, 주요 분석과 전망 등을
전달하고자 분주하게 노력했습니다.
다만, 바쁜 마음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도 나라살림 정책과 통계를 국민께 제때, 쉽게,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우리 재정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공론의 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라재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신축년에도 꼼꼼하고 간간한 독자로 남아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2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 재 훈**

contents

December, 2020
VOL. 48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성과관리 관련 최근 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0 · 재정칼럼

· 성과관리는 재정관리의 핵심
Marc Holzer, Suffolk University-Boston
·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정부 성과관리
John M. Kamensky,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26 · 톺아보기

2021년도 예산 주요 내용

28 · 정책 연구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재정 NOW

3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42 · 키워드 재정

노인일자리

46 · Data for All

디지털 뉴딜과 클라우드소싱

재정 STORY

48 · 이달의 재정 이야기

균형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 정책

54 · 재정 Talk Talk

연기금투자폴이란 무엇인가요?

56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렘브란트의 야경: 야경국가 vs 복지국가

60 · 경제철학 이야기

하이에크의 사상: 자유주의의 수호자

64 · 「열린재정」 활용 논문 공모전 당선작 소개

68 · 재정 캘린더

70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성과관리 관련 최근 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성과와 결실의 계절인 연말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치르고, 회사는 저마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적을 집계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실적을 확인하고 이른바 ‘가성비’를 쟁해보는 것은 낭비를 피하기 위함이다. 연간 500조원을 넘는 돈이 드는 국가 예산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연도별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알아본다.

1 _____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위 법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그중 두 번째가 시행령에 의해 다시 4~5가지의 이름으로 운영되므로 총 5~6가지의 성과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표 참조).

「국가재정법」

- 1) 제8조제2항: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 제출 시 각 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2) 제8조제6항: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이 언급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장관에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요구하거나, 2)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즉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관한 운용지침(기획재정부령)은 심층평가의 유형을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표의 도입 및 시행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평가는 2000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개선과 보완 차원에서 하나씩 추가되어 온 것이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하에서 성과계획서와 평가서 작성만으로는 성과와 예산 간 연계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부처의 자율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방식인 부처 자체평가의 한계점이 지적됨에 따라 2006년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개별사업 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사업군 단위의 평가가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0년 사업군 심층평가가 생겨났다. 한편 부처가 수행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메타평가 하던 방식으로 이뤄져 오던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2018년 폐지하면서, 성과에만 집중하는 평가제도로 인해 집행과정의 환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핵심사업 평가가 시작되었다.



표 . 현행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작성(평가)주체	성과계획서 /성과평가서 (「국가재정법」 §8②)	주요 재정사업 평가(「국가재정법」 §8⑥)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령 §3①)	재정사업 심층평가(시행령 §3①)		
			개별사업 심층평가 (‘지침’ §4제1호)	사업군 심층평가 (‘지침’ §4제2호)	핵심사업 평가 (‘지침’ §4제3호)
작성(평가)주체	각 부처	각 부처	기획재정부(전문연구기관에 위탁수행 가능)		
제출 및 공개	예산요구 시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심의 시 국회 제출	부처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대국민 공개	수행기관 홈페이지로 대국민 공개		
평가 단위	단위사업	작동	단위사업 대상으로 시행성과 중심 평가	유사 목적의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	단위 또는 세부사업 대상으로 집행현황 및 성과 종합 평가
기타	방대한 분량	체크리스트 방식	연구개발사업평가 ²⁾ 로 대체 가능 균형발전 영향평가 시행 가능		
도입연도	시범공개 2000년 전수제출 2008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8년

주 1)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평가

자료: 박홍업(2009), 박정수(2020), 「국가재정법」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_____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문제점

2~3년 주기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더하며 보완해 왔지만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유사한 평가가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업무의 가중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정성호(2020)가 지적하는 바 처럼, 성과평가체계가 앞서 설명한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도 혼재되어 있다. 평가의 오너십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수많은 이름과 목적의 평가들이 상호 단절된 채 때로는 중복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둘째로, 평가의 일관성 결여이다. 대상사업의 성격이나 평가의 성격, 부처, 귀속재원(기금/예산)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성과지표 정보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통합되지 않은 형태의 결과 정보가 성과평가관리 시스템에 쌓이기만 하고 있어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박정수, 2020). 셋째로 내용의 공개와 활용, 즉 예산으로의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강희우 외, 2018). 앞서 지적한 문제들로 인해 체계적인 환류가 어려운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환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미비하여 수많은 성과평가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견해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 해소될 것이며, 최근의 법 개정이 지향하는 바는 어디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 최근의 성과관리 관련 법령 개편 사항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2018년 이후의 법령 개편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심사업 평가의 도입이다. 2019년 1월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 핵심사업 평가제도는 종전에 부처가 수행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 하던 것을 폐지하면서 도입되었다.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핵심사업의 집행과정 및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써, 12개 분야 80개 내외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사업 시행 이후에 점수를 매기는 식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사업의 추진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환류를 시행하여 더 나은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다.

둘째,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재정지출 구조 및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을 시행하는 데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2020년 6월 초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의 조문이 추가되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3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시행령 개정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이 2020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지만, 기존 법령에 비추어보면 동 사업(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국가재정법」 중 성과관리 부분을 종전 1개 조문에서 대폭 확대하여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내용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운영이 성과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주요 내용: 1)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신설했고, 2)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을 지정하는 등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3) 성과 목표관리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4)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성과 정보 공개 노력을 의무화¹⁾.

앞에서 살펴본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문제점과 연관지어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의 상세 내용을 보면, 안 제85조의7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관서 장에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의 평가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안 제85조의12제2항에서는 성과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등 성과관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 장에게 성과정보를 생산, 관리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각 중앙관서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문제로 지적한 바 있는 성과관리 정보의 일관성 결여 및 정보의 체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류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안 제85조의13제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보수체계에 연계,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로부터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학계 안팎의 환류 부족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안 제85조의12),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안 제97조)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허브로서 재정정보원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내후년으로 다가온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통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준비하는 한편, 성과평가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모으고 활용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¹⁾ 기획재정부(2020),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4 ————— 맺음말

재정성과관리의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년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은 추후 운영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개정안 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안 제85조의12와 제97조는 성과 평가 결과 정보가 보다 일관된 체계 하에 축적되고, 이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정부가 성과관리체계 개선의 주된 해결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최근의 개정 내용이 평가의 종류만을 더하여 온 이전의 개정과는 차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근 눈부시게 향상된 정보화 환경을 활용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를 통한 환류 또한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적인 정보 공개와 환류가 이뤄지는 제도를 갖추어낸 뒤에도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전통적인 성과이론은 투명한 측정 및 결과 분석이 정부 성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성과정보 공개를 권장하여 왔다. 그러나 성과 투명성의 역설(Performance Transparency Paradox) 이론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부정적인 편견이 이미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성과정보 활용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는 역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즉, 성과가 높더라도 정부 신뢰가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정보의 활용 확대가 정책사업 체계 전반의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정돈된 성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와닿는 실제 성과 창출로 정부 신뢰를 함께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희우 외(2018).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8-14
- 박정수(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보고서 20-03
- 박홍엽(2009).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 제24호
- 정성호(2020). 「증거기반 정책결정 기제로써 성과관리: 법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erformance Management Can Improve Financial Management

성과관리는 재정관리의 핵심

Dr. Marc Holzer

*Distinguished Professor, Institute for Public Service, Suffolk University-Boston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Public Performanc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serves several purposes. To successfully operate their organizations, public managers need specific information. This applies to all management levels within all organizations. Performance measurement must be considered a requisite and critical part of the management process. Managers can use the data that performance measures provide to help them manage in three basic ways: to account for past activities, to manage current operations, or to assess progress toward planned objectives. When used to look at past activities, performance measures can show the accountability of processes and procedures used to complete a task, as well as program results. When used to manage current operations, performance measures can show how efficiently resources, such as dollars and staff,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조직과 범주에서든 통용되는 논리이다. 성과관리는 조직 운영의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자 기능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관리자들은 성과평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직운영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과거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대비 진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과거의 활동을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성과평가는 개별 프로세스와 절차들이 과업의 완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것과 동시 사업 자체의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의 시점에서 성과평가는 재원이나 직원과 같은 자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

Dr. Holzer is a past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ASPA), and founded the Northeast Conference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SPA's Sections on Korea, China, and Humanities/Arts. also, Former founding dean of the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at Rutgers University. He can be reached at: mholzer@suffolk.edu

(前) 미행정학회(ASPA)회장, 럿거스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대설립원장, PPMR 초대(설립)편집위원장





are being used. Finally, when tied to planned objectives, performance measures can be used to assess how effectively an agency is achieving the goals stated in its long-range strategic plan. Having well-designed measures that are timely, relevant, and accurate is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measures be used by decision-makers.

Why Develop a Performance Program?

Performance management – beginning with measures that highlight accomplishments, problems and opportunities – can contribute to the following fiscal advantages:

- **Improved decision-making:** Performance measures afford managers needed information to execute their control functions, improving efficiencies, cutting costs,

로 계획된 목표와 연관된 측면에서 성과평가는 조직이 장기적 전략에 명시된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기에 성과평가지표는 적시성, 정확성,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결정(입안)자들이 이를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또한 중요하다.

왜 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는가?

성과관리(달성, 문제, 기회들에 대한 측정에 기반한)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이점이 있다.

- **정책결정 개선:** 성과지표들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통제기능의 실행,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효과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와 같은 부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and investing in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s.

- **Performance assessment:** The measures connec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the management of employees, serving as a means of motivation.
- **Accountability:** The performance process engenders managerial responsibility, especially in budget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 **Service delivery:** The performance improvement process improves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helping position programs as worthy of future investments and as examples of future cost avoidance.
- **Public participation:** Performance reporting can influence the citizenry to care more about public workers' efforts to improve service delivery, thereby helping to build stakeholder support for increases in future budget cycles.
- **Improvement of civic discourse:** Making public discussions about public service delivery factual and data based, more responsible fiscal decisions are likely to result.



- **성과평가:** 지표들은 각 개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직원관리와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책임성:**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성과프로세스는 관리자의 책임성을 부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 **서비스 제공:** 성과개선프로세스는 서비스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해당 서비스가 왜 장기적인 투자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한지 보여줄 수 있다.
- **시민참여:** 성과보고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직자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예산확충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시민사회 담론:**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정책)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Type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veral different performance indicators are featured in a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The most common are: (1) inputs, (2) outputs, (3) outcomes, and (4) efficiency indicators.

Input Indicators. Inputs reflect the quantity of resources appropriated to a government organization, service, or program. Input indicators are typically contained within the budget, representing financial or personnel resources.

Output Indicators. Outputs are workload indicators. They

성과지표의 종류

성과평가제도는 다양한 종류의 성과지표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1) 투입(Input), (2) 산출(Output), (3) 결과(Outcome), (4) 효율성(Efficiency) 척도이다.

투입 지표: 투입 지표는 정부조직, 공공서비스 및 정책에 사용된 자원의 양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투입 지표는 예산에 포함되며 인적 및 재정자원을 나타낸다.

산출 지표: 산출 지표는 얼마나 많은 업무가 완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

reflect the amount of work done or the number of services provided by a government program.

Outcome Indicators. These indicators capture the results (or qua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Outcome indicators are essential to establishing whether an organization or program has met predetermined goals and objectives. They help answer questions about service quality and the impacts of service delivery. A measurable change in students' test scores resulting from a government-funded tutoring program is an example of an outcome indicator.

Efficiency Indicators. These indicators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 public organization or program is performing in relation to service delivery costs. Efficiency indicators refer to the ratio of the service provided (for example, tons of trash collected) to the cost required to deliver that service (wages for workers, gasoline for trucks, and the like).

Designing a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A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need not be complex. It is likely, however, to be difficult for those unaccustomed to measuring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targets. A system of measuring performanc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what an organization or program is trying to achieve, who its clients are, and what level of service is being delivered at the time. The seven specific steps are:

1. Identifying a program to measure
2. Designing a purpose statement
3. Classifying program inputs, outputs, outcomes, and efficiency indicators
4. Setting performance targets

나 많은 업무와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결과 지표: 결과 지표는 서비스로 인하여 얼마나 양질의 결과가 제공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조직이나 정책이 얼마나 설계된 목표와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필수 불가결한 지표이다. 이를 통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정부 지출로 제공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학생의 시험 성적에 변화는 결과 지표의 한 예이다.

효율성 지표: 효율성 지표는 정부조직이나 정책이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즉, 제공된 서비스(예를 들어, 수거된 쓰레기 양)와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인건비, 유류비 등)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는 과도하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애초에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체계는 조직과 정책의 목적, 수혜자,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의 단계를 적용해볼 수 있다.

1.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의 선택
2. 계획 문서의 기안
3. 사업과 관련된 투입, 산출, 결과, 효율성 지표들에 대한 구분
4. 성과목표의 설정

5. Monitoring performance
6. Reporting performance results
7. Concluding with analysis and action

Performance Responsibility Contributes to Fisc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fiscal responsibility, two performance approach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 performance budgeting and performance audits.

A line-item budget illustrates where public money will be spent item by item. However, the idea behind performance budgeting is that how much you spend on department x is tied directly to how well department x is performing. Performance budgeting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levels and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r data) that tells whether those performance levels have been met. The most common types of performance indicators are outputs and outcomes. Output indicators report units produced or the quantity of services provided by a department, an agency, or a program. Outcome indicators reflect how well a government entity is meeting its goals and objectives. These indicators are designed to answer questions that deal with the quality and impacts of government service delivery. The central points of performance budgeting are: (1) the amount of work that is done is measured; (2) the quality (or the results) of that work is measured; and (3) this impacts how much money a department will receive in the future. Departments that over-perform may receive more money, while those that underperform may receive less. Critics argue that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basis for determining budgets is counterintuitive, because taking money away from a struggling department is likely to make

5. 성과 모니터링
6. 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공표)
7. 성과 분석

성과관리는 재정책임성을 구현

재정책임성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두 가지 접근성은 특히나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이는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기반 감사이다.

품목별 예산편성은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공예산이 사용될지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성과주의 예산은 A 부서에 대한 지출을 A 부서의 성과에 기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 수준에 대한 구축과 이들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수집을 필요로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과지표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이다. 산출 지표는 부서, 조직 혹은 정책으로 인해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나 생산된 제품들을 나타내며, 결과 지표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들 지표는 공공서비스의 영향과 그 품질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제시한다. 즉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1) 완수된 업무량의 측정, (2) 업무의 품질에 대한 측정, (3) 이러한 측정이 향후 부서의 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부서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부서는 더 적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표적인 지적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어려움에 처한 부서에 더 적은 예산을 배정시킴으로써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말한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의 문제로써 성과지표 구축에 수반되는 주관성의 문제와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흔히 사용되는 감사의 종류로는 준법감사와 성과감사

matters worse. Also, some might argue that measuring performance is inherently problematic; that is, designing performance indicators is subjective, and collecting data can be time-consuming and expensive.

Common types of audits include what are called compliance and performance audits. Compliance audits ensure that a government organization spends its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law. Performance audits, however, examin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at is, a performance audit looks at whether a public organization is accomplishing its stated goals and objectives, and whether this is being done at a reasonable cost.

A commonly overlooked opportunity across these performance processes is that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learn from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other public organizations in their own countries and throughout the world. Strategies for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are being reported in hundreds of publications and scores of conferences, but they are not sufficiently accessed.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a rich trove of available information by sharing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conferences, and joining Web-based networks that include government officials, public and non-profit manag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citizens, and other stakeholders who are looking to improve public sector performance through the use and sharing of valid and reliable information.

We suggest the following systematic strategy i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ose fiscally responsible possibilities:



가 있다. 준법감사는 정부조직의 재정 사용에 있어서 그 준법성을 검증한다. 반면에 성과감사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검증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성과감사는 공공기관이 명시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러한 성과기반의 업무에 있어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과개선을 위한 전략들이 수백 개의 논문과 수많은 콘퍼런스들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들은 성과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직자, 비영리단체,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경험의 공유, 콘퍼런스 참석, 온라인 네트워크 가입을 통하여 교류하며 타당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정책임성의 가능성을 식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Search for best practice cases over a multi-year period rather than confining a search to the past year or two. Search across boundaries and networks. Use terms such as: Awards, Best Practices, Cases, Excellence/Excellent, Innovations, Models/ Model Programs, Performance, Quality, Recognition, Top Ranked, Quality Management, etc.
- Download and evaluate a manageable set of no more than ten best practices that promise to serve as adaptable models. Utilizing a term such as “award-winning” will narrow the number of possibilities to those that have been independently vetted. Similar terms are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columns. The search can, of course, be combined with reference to a specific service or type of organization. The evaluation should draw upon the judgment of multiple staff and stakeholders, should extend to a thorough familiarity with each website, and ideally should involve a group meeting to reach a consensus on which programs to pursue in more detail as “real-time practical applications.” They often focus on five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1) managing for quality, 2) developing human resources, 3) adapting technology, 4) building partnerships and 5) measuring for performance.
- Contact the program’s directors for further to confirm that a best practice is still in practice. Many award-winning innovations are no longer in existence due to problems of organizational politics, budget cutbacks, leadership changes at the organizational or political levels, or a host of other factors. Opening up a conversation with the staff can lead to a deep and informed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that case. From our experience, suggested questions might be as follows and can help build a strong
- 모범사례의 조사에 있어서 지난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의 기간을 두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경과 네트워크를 넘어 검색을 해야 한다. 중요한 키워드는 Awards, Best Practices, Cases, Excellence/Excellent, Innovations, Models/ Model Programs, Performance, Quality, Recognition, Top Ranked, Quality Management 등이 있을 것이다.
- 여러 가지 모델로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10개의 모범사례를 획득하여 분석해야 한다. “Award-Winning” 같은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외부에서 검증된 사례들로 더 쉽게 검색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키워드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있다. 이러한 검색은 물론 좀 더 세부적인 서비스나 조직유형에 대한 정보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판단 그리고 각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그룹 미팅을 통하여 어떤 사례가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란 성과 개선에 있어 다섯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1) 품질 관리, 2) 인적자원 개발, 3) 기술 적용, 4) 파트너십 형성, 5) 성과평가이다.
- 해당 정책의 책임자와 연락하여 조사한 모범사례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예산적, 리더십 혹은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다수의 수상기록을 보유한 혁신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 혁신을 담당했던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모범사례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단순히 모범사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적용 중 얻은 교훈들을 다시 공유하면서 서로 튼튼한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ionship with the program's directors and staff as they understand that you are not only interested in emulating their work, but that you and they will continue to share lessons learned, acting as unpaid consultants to each other:

-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innovation to come about? What is the "back story" on this project?
- Is it still operating? Have there been performance issues?
- What data is available as to its success?
- What are the most important lessons learned? Have there been constraints or dilemmas confronting key decision-makers?
- Beyond what is posted to the website, can you share the application that led to its award-winning designation? News articles?
- Is there a manual you can share? A training video?
- Are you available for further questions?

Overall, best practices are a valuable, low investment means of identifying and adapting performance-enhancing innovations. They are relatively easy to find, but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such a search process is widely utilized. Best practice research is not systematically taught or practiced. Public officials rarely look for such knowledge beyond the boundaries of their own cities or states, and seldom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The benefit/cost ratio for such efforts is undoubtedly considerable whether measured in terms of savings or quality improvements.

"Doing more with less" emerged as an enduring maxim directed toward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as such, performance measurement has become a vital tool for organizational improvement in the context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fiscal accountability.

- 실제 이 모범사례가 개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했는가? 그 배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아직도 사용 중인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 이를 통하여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정책결정에서 제한요소나 딜레마가 있었는가?
-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말고, 수상에 다다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용사례가 있는가?
- 혹시 공유 가능한 매뉴얼이나 교육영상이 있는가?
- 추가 질문을 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모범사례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저렴하게 식별하여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조사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모범사례 조사는 체계적으로 교육되지도,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공직자들은 그런 모범사례의 조사를 국외는커녕 자신들의 행정구역 경계 바로 너머에 있는 이웃 도시나 주에서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의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의문의 여지없이 높은 비용편익비를 가진다.

"Doing more with less"라는 구호는 모든 정부 레벨에 통용되는 구호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에 수반되는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재정 책임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Evolu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Over the Past Three Decades*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정부 성과관리

John M. Kamensky

Senior Fellow,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The U.S. federal government formally launched it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ith the passage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 during the Bill Clinton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at law required federal agencies to develop strategic plans, annual performance plans, and then at end of each fiscal year, annual performance reports on their progress against their plans.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veloped the init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ut subsequent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refined or redirected this initial system by the way they addressed the following strategic design questions: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1993성과평가법(이하 GPRA)이 통과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제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법률은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각 회계 연도 말에는 연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기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후의 각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질문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초기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었다.

John M. Kamensky is a senior fellow with the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in Washington, DC USA. He helped draft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worked at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served as the deputy director of Vice President Al Gore's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in the 1990s. He is a fellow of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He can be reached at: john.kamensky@us.ibm.com

Al Gore 부통령 성과관리 총괄책임관, 1993 GPRA 입안 총괄



- Who is put in charge of each agency's performance management routines?
- What is the emphasis and scop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efforts?
- What is the "unit of analysis" for performance reporting?
- Who are the intended user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formation being produced?

The Clinton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1993-2000). The GPRA law was silent about who in each agency would be in charge of their performance management initiatives. The Clinton administration left the decision to each agency. As a result, the lead in some agencies was the chief financial officer, and in others, the lead for planning, and in still others, a new office was created.

The central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in the White Hous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easures of outcomes achieved – such as reduced infant mortality - not just the number of outputs produced and targets met – such as the number of immunization shots administered to infants. This emphasis, however, was largely aspirational because most agencies lacked the capacity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ir programs. The major emphasi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to produce a supply of performance information for agency, congressional, and public use. It was believed that creating a supply of information would naturally generate a demand for its use. It did not.

- 각 기관의 성과관리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 성과관리 노력에 있어서 강조할 부분과 범위는 무엇인가?
- 성과 보고를 위한 '분석 단위'는 무엇인가?
- 생산된 성과관리 정보의 주된 사용자는 누구인가?



클린턴 행정부 성과관리(1993~2000).

GPRA는 각 기관에서 누가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각 기관에 일임했다. 그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되고, 다른 기관에서는 기획책임자, 다른 기관에서는 새로운 보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이하 OMB)는 유아 사망률 감소와 같은 달성한 성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아에게 투여되는 면역주사 수 등과 같이 생산량과 목표치만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사항들은 대체로 수사어에 그칠 뿐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은 기관, 의회 및 공공 용도에 대한 성과정보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정보의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정보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e scope of the effort was governmentwide - for each of the 24 major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each of about 100 smaller agencies, to produce strategic plans, annual plans with measures, and annual year-end reports. The “unit of analysis” was to produce information at the agency level, and the primary intended users were Congress and the public, for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purposes. But in practice, the reports were ignored.

The Bush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2001 – 2008).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itially questioned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reated under GPRA. They felt that the system crea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largely a compliance exercise that resulted in a large supply of performance information, but no demand for its use. They also felt that the “unit of analysis” – a focus on agency-level data and reporting – created information that was not actionable.

Instead of seeking to revise GPRA, President Bush administratively created a paralle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shifted the unit of analysis from agencies to individual programs within agencies. He directed OMB to develop a standard set of questions – the Program Assessment Review Tool – to assess each program and score each program on a scale of 0 to 100. The scope of the effort was governmentwide. The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d a “program” that was developed by OMB was somewhat arbitrary and inconsistent. Nevertheless, OMB assessed about 200 programs a year over a five-year period and posted the resulting assessments and scores on a public website. OMB attempted to use the assessments to inform budget priorities, but this was ignored by Congress, which

이러한 노력의 범위는 24개 주요 부서 및 기관별 정부 전체를 포함했다. 그리고 전략 계획, 대책을 포함한 연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 100개의 소규모 기관 각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단위”는 기관 차원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보의 주된 활용자는 감시와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의회와 국민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고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시행정부성과관리(2001~2008).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당초 GPRA에 기초해 만들어진 성과관리제도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제도는 대체로 준수 시행(Compliance Exercise)에 그칠 뿐이고 이로 인해 성과정보의 대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수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기관 수준의 정보와 보고에 초점을 둔 “분석 단위”의 정보가 실행 불가능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고 인식했다.

GPRA의 개정을 모색하는 대신, 부시 대통령은 성과관리의 분석 단위를 기관에서 기관 내 개별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부시 대통령은 OMB에게 질문의 표준화를 가능케 할 프로그램 평가 검토 수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단은 각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각 프로그램의 점수를 0에서 100으로 매긴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 전체를 포괄 범위로 했다. OMB가 만든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정의는 다소 자의적이었고 일관성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MB는 5년간 매년 약 200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 결과와 점수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OMB는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평가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평가 과정을 정치적 노력을 여겼던 의회는 이 보고서를 무시했다.

viewed the assessment process as politically-driven.

The assessment process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role in each agency – a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 who reported to their agency’s Chief Operating Officer (typically a political official who was second in command in their agency). The emphasis was to increase accountability for results, since a large part of the score was based on an agency’s ability to “demonstrate results” for each program. The intended primary users of the scorecard were top agency officials and OMB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to inform budget decisions.

Towards the end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role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was formalized via a presidential directive, and a cross-agency council comprised of these officers was created so they could share lessons learned and undertake joint projects.

The Obama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2009 – 2016).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suspended the scoring of agency programs but continued the role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They felt that the level of effort to score 1,000 programs was too overwhelming, and that the scoring process had become a compliance exercise. In its place, OMB directed agencies to identify a small handful of 3 to 5 “priority goals” that they would focus upon for a two-year peri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results of these priorities. This resulted in less than 100 goals to be tracked governmentwide. This reduced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ignificantly for decision makers. This allowed agency leaders to focus on a manageable set of priorities, which they reviewed on a quarterly basis and posted progress reports publicly on the

평가 과정은 각 기관에서 ‘성과 개선 책임자(이하 PIO)’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 책임자는 기관의 최고운영책임자(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서열 2 위 정치관료)에게 보고했다. 평가 점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는 기관의 능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점수 카드의 의도된 주요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급기관의 관료와 OMB였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는 대통령 지시로 PIO의 역할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범부처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들이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성과관리(2009~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기관 프로그램 점수를 평가(PART)하는 하는 것을 중단하면서도 동시에 PIO의 역할은 이어갔다. 책임자들은 1,000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채점 과정이 단지 준수 사항이 되었다고 느꼈다. OMB는 그 대신 기관들에게 3~5개의 “최우선 목표” 중 일부 소수의 목표를 식별하도록 지시했다. 기관들은 해당 우선순위의 성과와 결과의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 전체에 걸쳐 100개 미만의 목표가 식별되었고, 곧 정책결정자가 관리해야 할 성과관리의 범위를 크게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기관 지도자들은 관리 가능한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분기별로 현장 점검에 기초한 진행상황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internet. In addition, OMB itself identified about a dozen cross-agency priority goals that it worked with agencies in implementing, such as developing a cross-agency permitting and license approval process for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The broader data required under GPRA continued to be collected and reported to Congress and the public, but it was largely ignored.

In 2010, Congress formalized various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that had evolved in years after passage of the original law, such as the designation of agency and cross-agency priority goals, via the GPRA Modernization Act. In addition, this law formalized the roles of Chief Operating Officer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in each agency. It also required several new administrative routines: a quarterly progress review of agency and cross-agency priority goals and posting progress reports publicly on the internet (see: <https://www.performance.gov>), and an annual review of the progress of portfolios of major agency programs. The portfolios of programs subjected to annual reviews were administratively defined as each agency's "strategic objectives." Strategic objectives are portfolios of interrelated programs that have a common objective, such as the Commerce Department's strategic objective to reduce the impact of severe weather. In addition, Congress directed OMB to develop an inventory of all government programs. However, the first inventory was viewed as so idiosyncratic that it was declared not useful and the effort to refine the inventory was suspended.

In parallel to the formaliz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Obama administration undertook a number of new initiatives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또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개발 등 OMB가 자체적으로 기관과 협력해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 약 12개를 식별했다. GPRA에 근거한 광범위한 정보가 계속 수집되어 의회와 대중에게 보고되었지만, 대체로 무시되었다.

2010년, 의회는 기존 법률이 통과된 이후 몇 년 동안 발전해왔던 다양한 성과 관리 관행을 공식화했다. GPRA Modernization Act(이하 GPRAMA)를 통한 기관 및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 지정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각 기관에서 최고운영책임자와 PIO의 역할을 공식화했다. 또한 기관의 분기별 현장점검 보고서와 범부처 우선순위목표, 그리고 진행상황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몇 가지 새로운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 연간 검토는 주요 기관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 진행 상황을 연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각 기관별 대상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전략적 목표"로 정의했다. 전략적 목표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상호 관련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다. 예시로는 추운 겨울 한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상무부의 전략적 목표와 같은 것이 있다. 나아가 의회는 OMB에게 모든 정부 프로그램의 전수목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결과물은 결국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중단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과관리제도의 공식화와 병행하여 성과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수행했다.

- opening up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data to the public (and to other agencies),
- developing agency capacity to conduct evidence-based analyses,
- developing an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itiative,
- professionalizing the program management profession within agencies (and a new law mandated the creation of agency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Officers to lead this effort), and
- piloting various behavioral science initiatives.

These initiatives helped shift the overall emphasi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rom a primary focus on accountability to external stakeholders to a greater focus on its use by internal stakeholders for learning and sharing purposes,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and results – especially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Trump Performance Management Approach (2017 – 2020).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performance management agenda had a slow start. The governmentwide lead in OMB was not appointed until over a year after his administration took office and she left a year before the end of his four-year term. Surprisingly, given the amount of turmoil cre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most other areas of government, it largely left in place the performance framework created under the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This stability was welcomed by agencies. The stability allowed OMB to grow its own internal capacity via a series of implementation teams for the cross-agency priority goals.

- 공공(및 다른 기관)에 정부 데이터의 공개
- 증거기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 개발
- 리스크 관리 이니셔티브 개발
-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 관리 전문직의 전문화(및 새로운 법률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기관 프로그램 관리 개선 책임자를 신설하도록 의무화)
- 다양한 행동과학 이니셔티브(역자주, 일종의 넛지)를 시범 운영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성과관리제도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내부 이해관계자가 학습 및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특히 활용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 성과관리(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관리는 시작이 늦었다. OMB의 책임자는 행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았고, 전임자는 결국 4년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에 떠나고 말았다.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정부영역에 야기한 혼란에도 GPRA에 근거해 만들어진 성과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는 기관들이 성과체계를 옹호했기 때문이며, 이에 OMB는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를 위한 일련의 집행팀을 통해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UNITED STATES

OMB also formaliz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via guidance with timetables to agencies. This resulted in more robust and predictable administrative routines in agencies, tying their agencies' performance management routines to other existing decision-making processes such as planning and budget. For example, the Treasury Department held quarterly review meetings with senior departmental leaders on the progress of its priority goals, but also for progress reviews of each of its major bureaus. It also used its annual review of progress on its strategic objectives to surface departmentwide issues when meeting with OMB.

In parallel, much lik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continued developing staff capacity to use data, evidence, and evaluation in support of agency decision making. Congress reinforced this effort by passing the Foundations in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in 2018. This law formalized the designation of agency-level Chief Data Officers and Chief Evaluation Officers. It also required each agency to develop multi-year evidence-building plans (also called "learning agendas") to identify critical research and policy questions and priority actions for program improvements. The first set of agency learning agendas will be delivered to Congress in 2022 along with their next set of strategic plans, as required under the GPRA Modernization Act.

Issues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When Joe Biden is sworn in as president in January 2021, he will likely keep the basic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gency and cross-agency priority goal framework that seems to work well. However, his administration will face two important strategic issues in the design of the performance

OMB는 시간표(로드맵)에 기반한 지침을 통해 성과관리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기관의 행정 절차를 보다 강력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기관의 성과관리 절차를 계획 및 예산처럼 기존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와 연계시켰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부서장급 관료들과 분기별로 우선순위 목표의 진척상황에 대한 검토 회의를 열었지만 주요 부처별 진척상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OMB와 만날 때 부서 전체의 문제를 표면화하는 전략목표에 대한 매년 진행상황을 검토했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개발을 이어나갔다. 의회는 2018년에 증거기반법률(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 법은 기관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와 최고 평가책임자(CEO)를 공식화했다. 또한 각 기관이 중요한 연구 및 정책 질문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조치 파악 등 다년간 증거구축 계획('학습의 제'라고도 함)을 수립하도록 했다. 첫번째 기관 학습은 GPRA에 근거해 추후 전략 계획과 함께 2022년 의회에 전달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문제. 202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할 조 바이든은 기본 거버넌스 구조와 기관, 그리고 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곧 물려받을 성과관리제도의 구조에 있어서 두

management system he will inherit.

First, he will face the perennial challenge of getting government leaders to make evidence-informed decisions using information developed by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ronically, the public reporting of data o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popularized th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how it is displayed and interpreted. This could drive greater demand for performance information by government decision makers and the public in coming years. In addition, the GPRA Modernization Act's top-down model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now being complemented with the Evidence Act's bottom-up approach to identifying and solving performance challenges. This bottom-up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bring more real-time data, analytics, evaluation, and visualization capacity to agency leaders at the program level and engage them in their use of evidence in program operations.

And second, governanc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the addition of new functional leaders (required by law) for program management, data, and evaluation. Getting these different players to work in concert with agency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and other agency leaders could dramatically improve th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t all level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olving this could be the Biden administration's contribution to the continued evolution of the U.S. feder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가치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그는 정부 지도자들을 성과관리제도에 의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하도록 참여시켜야 하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성과정보의 활용과 이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해석되는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정부 정책결정자와 국민이 성과정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GPRA의 성과관리 하향식 모델은 성과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증거기반법률의 상향식 접근법으로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접근은 기관의 수장에게 프로그램(사업) 수준에서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평가 및 시각화 능력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둘째, 프로그램 관리, 데이터, 평가(법률상 요구되는)를 위해 새로운 직군의 리더들이 추가되면서 성과관리제도의 거버넌스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렇게 다른 주체들이 기관의 PIO와 다른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연방 정부와 모든 수준의 성과 정보의 사용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소)하는 것은 바 이든 행정부가 미국 연방 성과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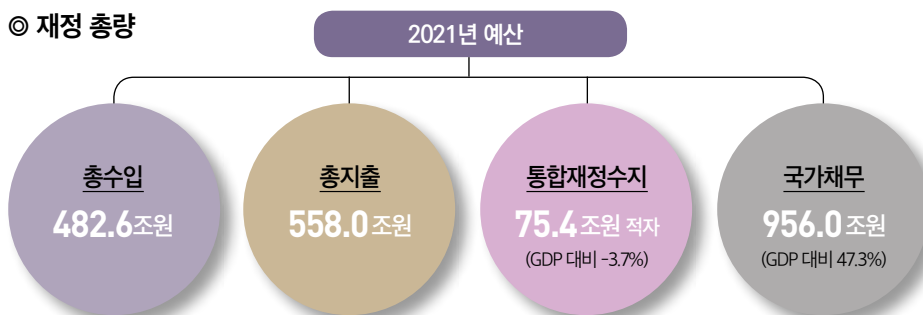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21년도 예산 주요 내용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 재정 총량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A)	4차 추경	예산안 (B)	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수입	481.8	470.7	483.0	482.6	-0.4	0.8
◇ 총지출	512.3	554.7	555.8	558.0	2.2	45.7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30.5 (-1.5)	-84.0 (-4.4)	-72.8 (-3.6)	-75.4 (-3.7)	-2.6 (-0.1%p)	-44.9 (-2.2%p)
◇ 국가채무 (GDP 대비, %)	805.2 (39.8)	846.9 (43.9)	952.5 (47.1)	956.0 (47.3)	3.5 (0.2%p)	150.8 (7.5%p)

◎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A)	2021년 예산(B)	증감 (B-A)
총지출	512.3	555.8	558.0	2.2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9.7	-0.2
2. 교육	72.6	71.0	71.2	0.2
3. 문화·체육·관광	8.0	8.4	8.5	0.06
4. 환경	9.0	10.5	10.6	0.1
5. R&D	24.2	27.2	27.4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28.6	-0.5
7. SOC	23.2	26.0	26.5	0.5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22.7	0.3
9. 국방	50.2	52.9	52.8	-0.1
10. 외교·통일	5.5	5.7	5.7	-0.04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22.3	0.5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84.7	-1.8

◎ 2021년 예산 국회중액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3.0 조원

2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 블루 극복 지원 등
-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1.0 조원

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0.7 조원

4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저탄소 경제·사회기반, 신재생에너지 전환, Net-Zero 산업생태계, 기후변화 정책인프라



0.3 조원

5 보육·돌봄 지원 강화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0.3 조원

6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 방문 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 (고용약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0.3 조원

7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 (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 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 (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로서비스·고용지원 확대
- (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0.1 조원

8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

-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 (대중교통)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0.2 조원

9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 재해 등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경감, 코로나19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0.2 조원

10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



1.4 조원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11월 발간된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나원희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 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MF와 OECD에서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지표 체계이다. COFOG는 사전적으로 기능(분야)별에 따른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 검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지출의 추세 등 제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성호 외, 2015). COFOG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거버넌스가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과 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던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¹.

2 분석방법 및 결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dBrain, 열린재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단위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앙정부(dBrain)의 교육 분야 지출은 교육부 등의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사업과 교육행정 비용이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 등 교육 분야로 분류된 전체 지출이 포함된다. 중앙정부

¹ COFOG는 GFS 기준과 SNA 기준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SNA 기준 COFOG만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IMF GFS 기준 COFOG는 총지출만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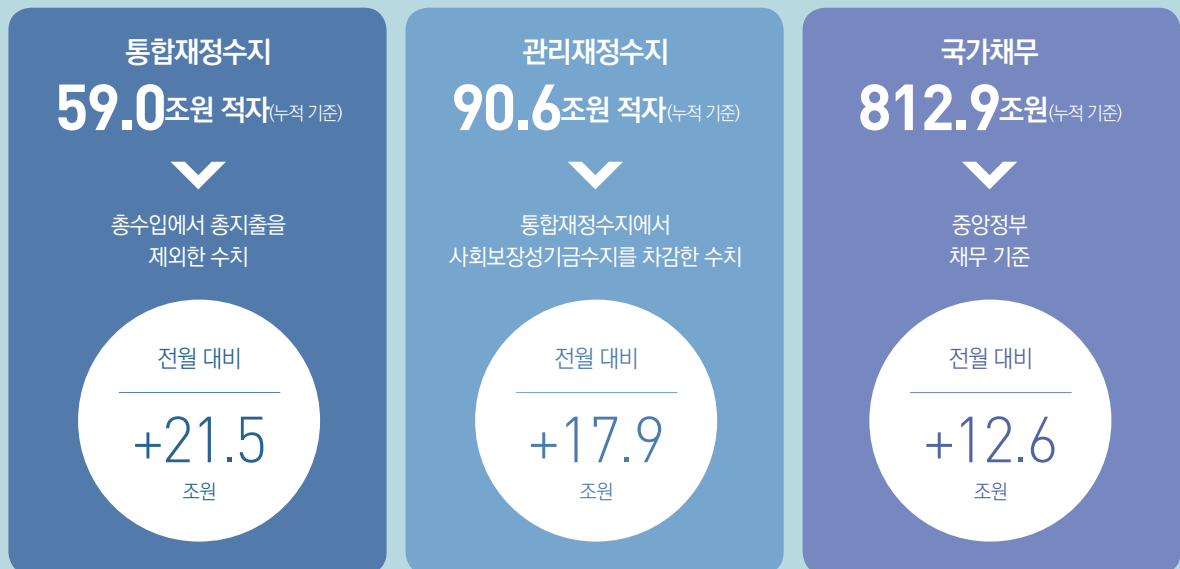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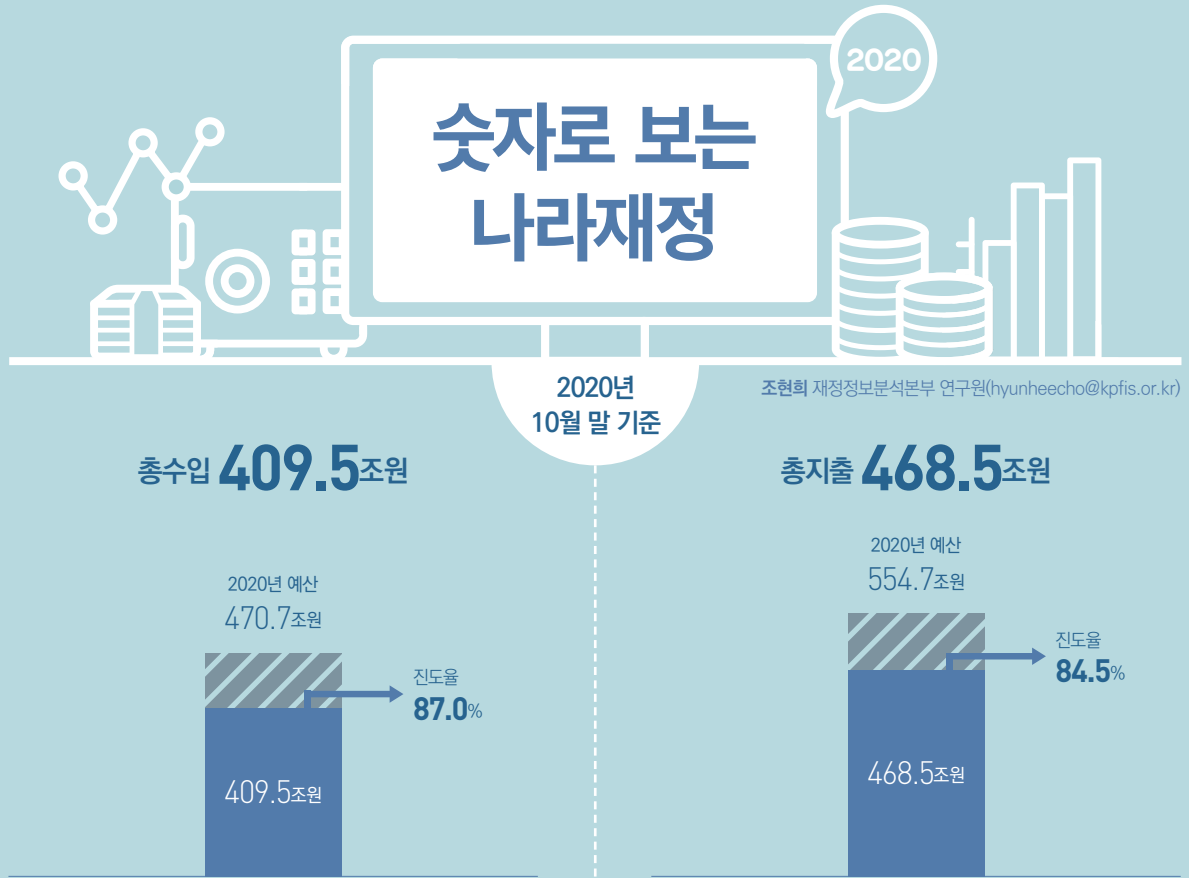
(dBrain)에서 교육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타부처에서 대학으로 지원된 연구 개발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등은 대학재정알리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후, 교육 분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e호조)의 교육 분야 지출은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과 고등교육(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의 세입결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이전수입이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2016회계연도²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정부지출은 총 72조 5,936억원(총지출 대비 13.8%)이며, 총지출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라트비아(14.8%), 에스토니아(14.4%), 리투아니아(14.0%), 스웨덴(13.3%), 덴마크(12.9%)와 비슷한 수준이다.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 분야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교육재정 통합플랫폼이 부재하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을 현재와 같이 다기화된 체계에서 가능한 하나의 재정 통로(채널)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사이트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부처 교육정책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전체 교육단계별 통계 생산 및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총괄 기관 혹은 조직의 신설 등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정부의 교육 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재정통계의 정합성과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와 같이 각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교육)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부문 구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지원한 대학지원금, 연구개발비, 학자금지원 등이 교육 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혹은 농림수산 등으로 분류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한 지출은 타 분야의 성격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² 국제비교를 위해 GFS yearbook, Education at A Glance 등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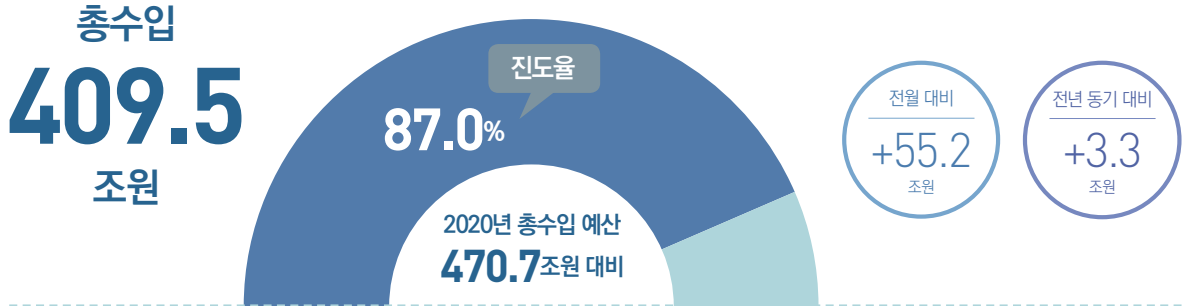
주 1)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12.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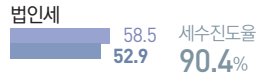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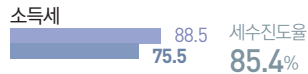
• 2020년 10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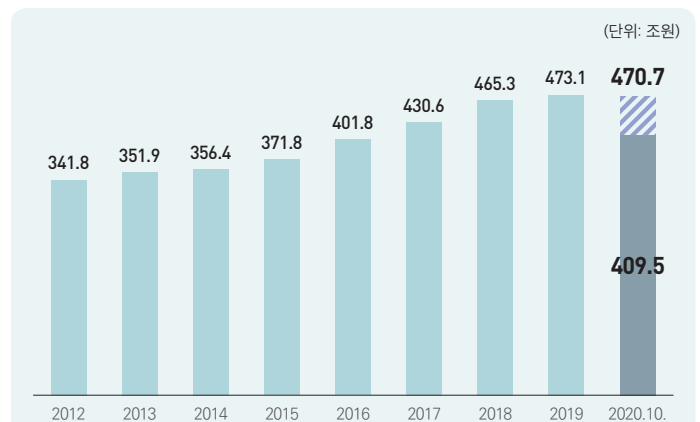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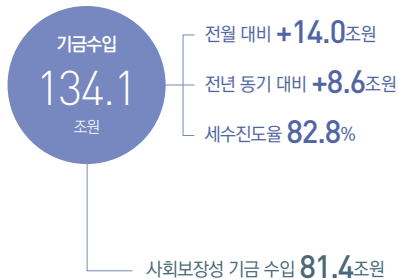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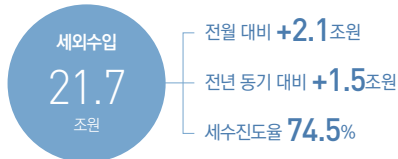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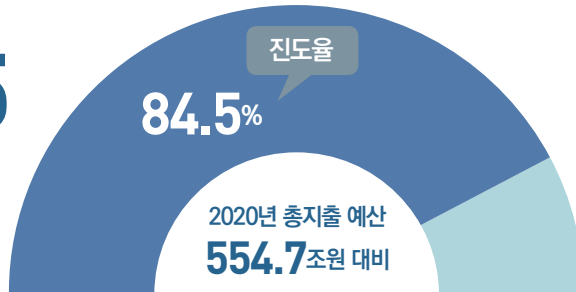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10월 말 기준

총지출
468.5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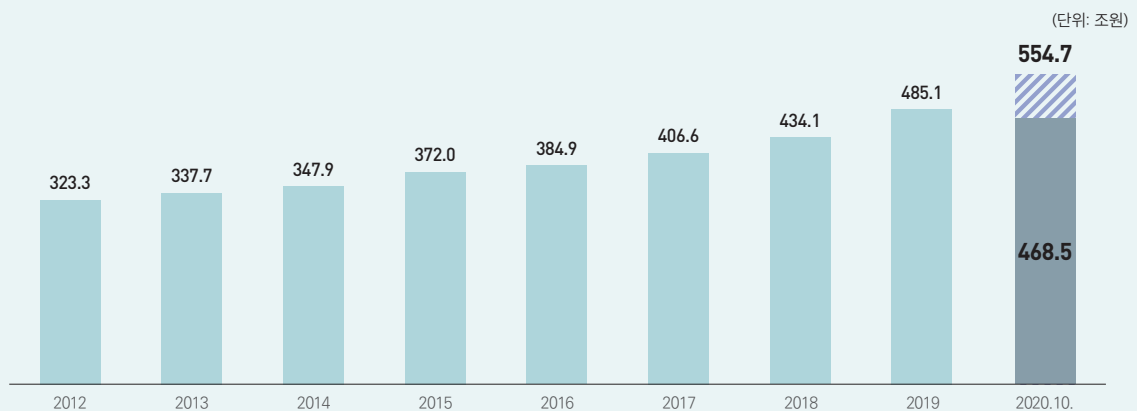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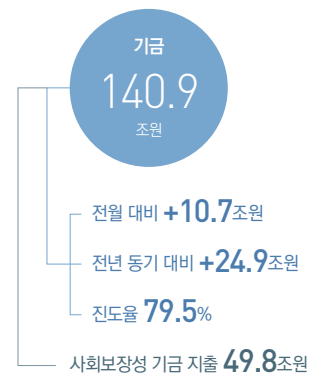
전월 대비
+33.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0.9
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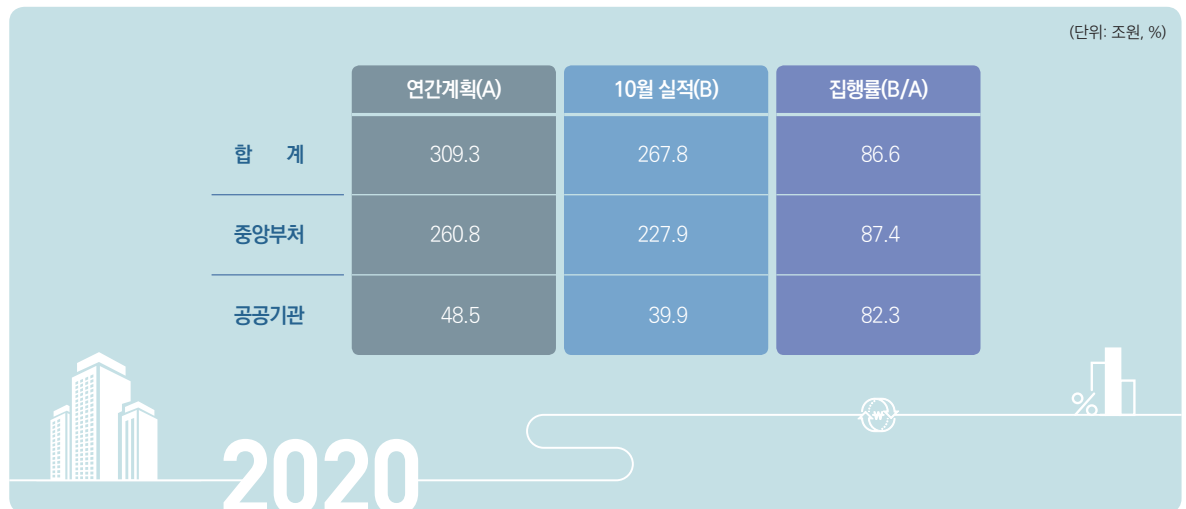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86.6%**



*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 변경 등 반영으로 연간계획 변경(308.8조원→309.3조원)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10월 실적	집행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94.2
2	산업통상자원부	7.5	94.1
3	행정안전부	45.0	93.0
4	보건복지부	19.3	92.4
5	교육부	51.9	90.9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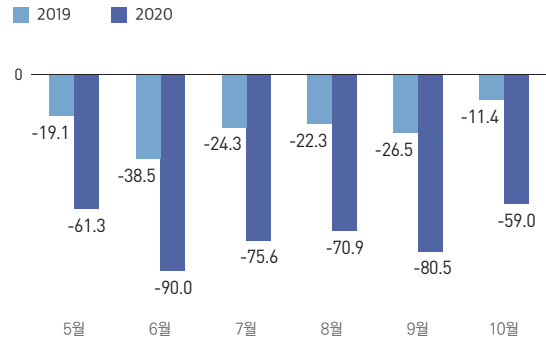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10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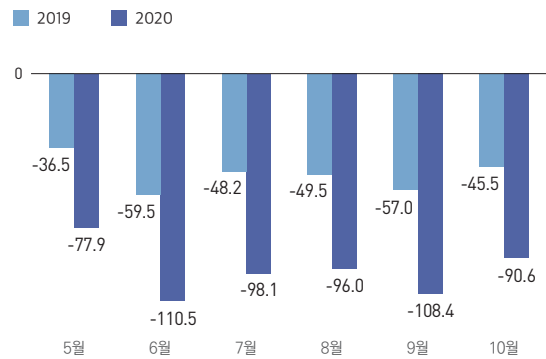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59.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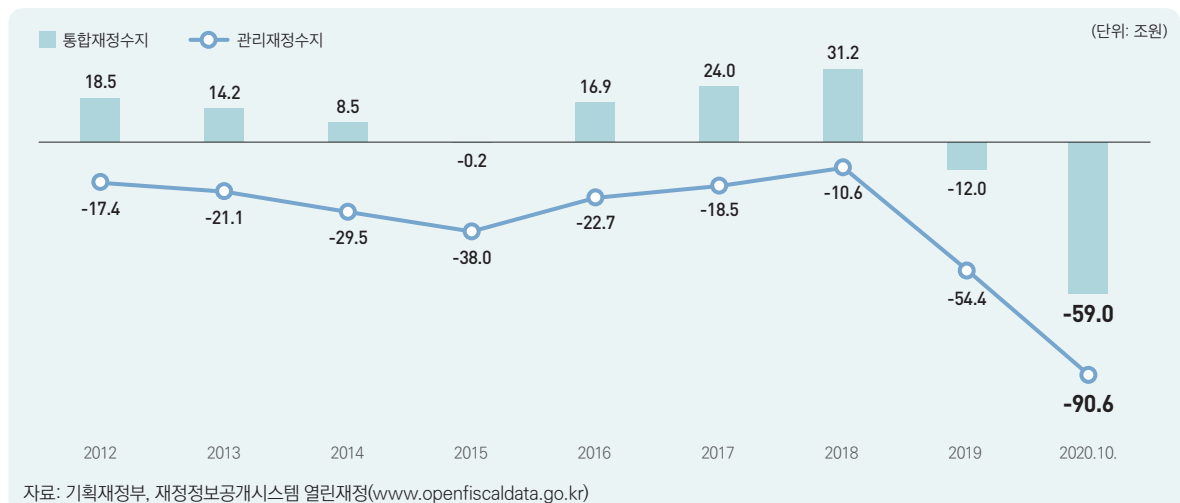
90.6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1.6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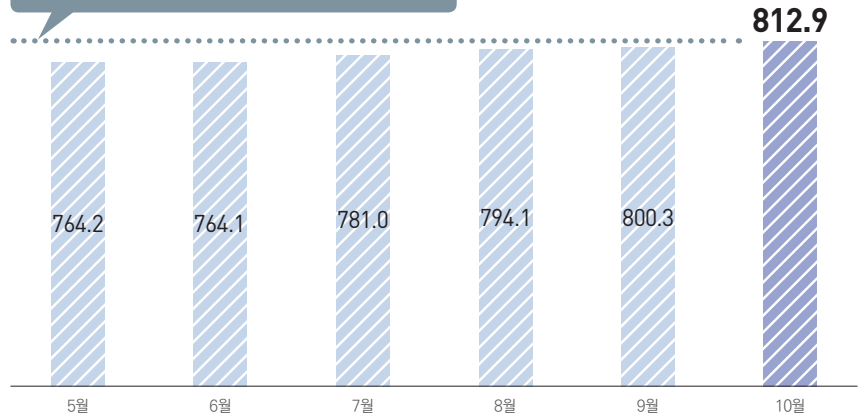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12.9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14.9조원



전월 대비

+12.6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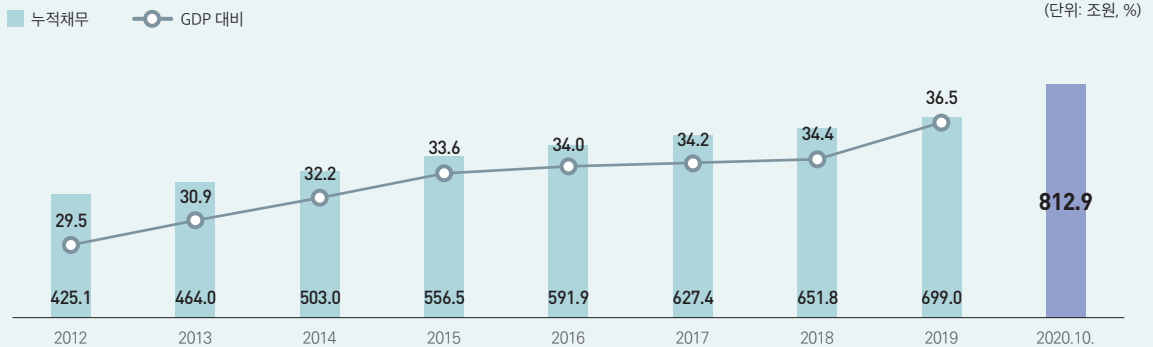
전년 대비

+113.9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나,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이나 보험, 대위변제 등과 같은 사업 경비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맞춰 신속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산으로 운용한다면 예산에 적용되는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사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이처럼 복잡하고,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상황에서도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특정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기금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 소개 및 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기금의 이해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예산 및 기금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기금의 이해에서는 기금의 도입배경, 목적, 운용절차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이해 탭에서는 기금의 도입과 설치 및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 기금의 분류,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과정 및 변경 절차, 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운용의 평가 및 기금제도 개선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도표 등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예산 및 기금에서는 기금의 목적, 구성, 종류 등을 만화 형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배움터
재정교실
재정웹툰

재정이란?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연기금부채

국고

부채

국채

조세

회계결산

주요재정제도

예산의 이해
기금의 이해
예산 및 기금 지원

기금의 이해

기금의 도입과 설치 및 외국의 기금 운용사례

기금의 첫 도입(1961년)

기금은 1961년 제1차 중점사업 예산을 대폭하여 새로이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원래 「국가재정법」 제21항은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기금을 산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정부의 출납을 쓰는 법률에 따른 민간법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법률로써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21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종 연금사업, 보필사업, 대학원칙 등 발령상 자금사유가 발생하면 당면한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외부적 경비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재정현상 등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기금은 각종 연금사업, 보필사업 등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되는 데, 결국 기금이란 법률에 의하고 급박한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일반적 제인으로 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독립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독립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기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하는 예비적인 제도로 기금설치 요건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949년 이전에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었으나 1949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출연금 및 법률에 따른 민간법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21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통계·문서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등 6건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등 10건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기금 자산운용 현황 등 4건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기금수입

상세재정통계DB > 지방재정 > 지방재정 기금결산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기금 관련 재정데이터를 예산, 결산, 성과평가 등 재정운영 과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데이터명에 '기금'을 검색한 뒤, 좌측에 있는 예산 폴더를 클릭 하면(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등 6건의 문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총괄)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건¹⁾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문서뷰어 및 다운로드를 통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에 있는 결산 폴더를 클릭(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하면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등 10건의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에서는 각 기금별 수입 관련 데이터(수입계획액(원), 수납금액(원), 순액(원), 증감액(원), 증감순액(원))과 지출 관련 데이터(지출계획현액(원), 지출금액(원), 순계(원), 순액(원), 증감순액(원), 다음연도이월액(원), 불용액(원))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조건 열기'를 클릭해 회계명 안에 조회를 원하는 기금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원하는 기금의 데이터만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문서 이외에도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성과평가, 수지, 지방재정 폴더를 클릭하면, 각 카테고리별 기금 관련 통계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No.	파일명	확장자	사이즈	다운로드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df	1.24Kb	9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df	1.24Kb	102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레이아웃 | 기금 | 검색

전체 10건 (1/1 page)

재정레이아웃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기금별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입니다.	19451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 - 기금별 재정상태표 회계기금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 정보입니다. (2009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19451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 - 기금별 재정운영표 회계기금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 정보입니다. (2009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19451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 - 기금별 순자산변동표 회계기금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 정보입니다. (2009회계년도부터 조회가능)	19451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 - 기금별 국가지원 현황 회계 - 기금별 국가지원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19451 CHAR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국고국
연기금투자율 수직규모(분기별) [연기금 투자율 정보]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19451 Open API	분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연기금투자율 기간수익률(분기별) [연기금 투자율 정보]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19451 Open API	분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연기금투자율 수직규모 [연기금 투자율 정보]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19451 CHART Open API	분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연기금투자율 기간수익률 [연기금 투자율 정보]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19451 CHART Open API	분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재무제표 기금재무제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19451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메타정보열기

SHEET | OPEN API

회계연도 2019 | 조회

회계명

세부조건 열기

No	회계연도	회계명	(수입)수입계획액(원)	(수입)수입실액(원)	(수입)수입잔액(원)	(수입)수입감액(원)	(수입)수입증정액(원)	(지출)지출계획액(원)	(지출)지출실액(원)
1	2019	고용보험기금	17,055,903,000,000	23,508,840,585,360	15,635,776,712,500	6,442,931,585,360	-1,430,132,257,500	17,072,488,281,070	23,508,840,585,360
2	2019	공공기관관리기금	177,583,108,000,000	854,620,624,180,900	179,130,894,180,900	376,837,536,180,900	1,137,586,180,900	177,583,108,000,000	554,620,624,180,900
3	2019	공무원연금기금	21,247,833,000,000	38,458,393,344,237	20,963,062,338,899	19,210,469,344,237	-124,760,651,448	21,256,357,395,205	38,458,393,344,237
4	2019	공적자금상환기금	8,723,846,000,000	8,954,595,718,400	8,457,795,718,400	-168,790,281,600	-268,090,281,600	8,723,846,000,000	8,954,595,718,400
5	2019	비핵기금관리기금	165,160,000,000	250,984,920,710	181,775,131,950	83,874,920,710	165,815,131,950	165,160,000,000	250,984,920,710
6	2019	광물자원개발기금	1,237,011,000,000	2,055,215,181,380	1,246,600,442,660	818,204,181,380	9,589,442,660	1,239,520,672,790	2,055,215,181,380
7	2019	국민연금관리기금	4,230,752,000,000	6,383,962,441,310	3,926,157,191,420	2,153,210,441,310	-304,594,608,580	4,239,461,569,760	6,383,962,441,310
8	2019	국민연금기금	115,163,219,000,000	454,204,739,052,87	145,417,602,088,92	375,039,520,052,87	25,252,383,088,927	119,177,587,889,90	484,204,739,052,87
9	2019	국민연금추진기금	2,349,294,000,000	2,970,820,838,899	2,970,820,838,899	621,526,838,899	621,526,838,899	2,352,395,108,400	2,970,820,838,899
10	2019	국유재산관리기금	1,511,083,000,000	3,821,447,425,040	1,977,236,104,420	2,310,364,425,040	466,153,104,420	1,815,332,665,020	3,821,447,425,040
11	2019	국채보상기금	177,607,000,000	190,347,693,143	190,347,693,143	-27,259,305,837	-27,259,305,837	177,607,000,000	190,347,693,143

1 연도별로 1건씩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 2건이 존재한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예산기관별

자료출처별

동계분류

동계목록 다운로드

펼침/닫기

예산

입법

결산

성과평가

공시통계

자유

소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데이터명

기금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 API

전체 4건 (1/1 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기금 자산운용 현황	SHARED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	SHARED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별 투자물 예시비중	SHARED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기금운용평가보고서 1. 평가의 목적 ○ 기금운용의 실마리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	FILE	연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전체목록

기금별 수입/지출

본문

예산기관별

자료출처별

동계분류

동계목록 다운로드

펼침/닫기

예산

입법

결산

성과평가

공시통계

자유

소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데이터명

기금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 API

전체 1건 (1/1 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기금수입 기금수입은 세목별 월별로 조회합니다. 통계 항목 중 기되는 수입다재경비 관...	SHARED Open API	월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전체목록

기금별 수입/지출

본문

예산기관별

자료출처별

동계분류

동계목록 다운로드

펼침/닫기

예산

입법

결산

성과평가

공시통계

자유

소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데이터명

기금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 API

전체 1건 (1/1 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지방재정 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결산현황	SHARED	연간	행정안전부

3 ————— 주요 정책 정보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기금' 검색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자산운용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금평가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 5월에는 2020년 기금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존치평가대상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의 존치 타당, 2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권고와 함께, 자산운용평가 대상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평가 결과(탁월 4개, 우수 10개, 양호 24개, 보통 5개, 아주미흡 1개)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26일자 보도자료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과 관련된 그동안의 보도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기금'을 검색하시면 기금과 관련된 정부의 보도자료(1998년부터 2021년까지, 총 506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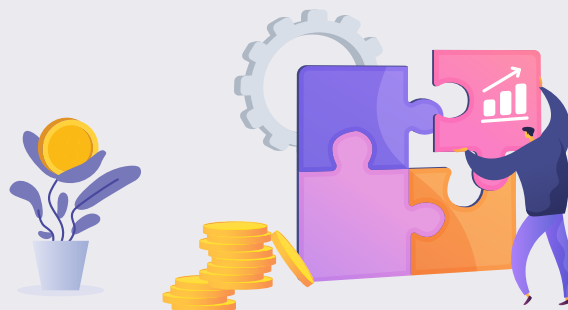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506건

Q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녹색기후기획과	2020-11-14	22
대외경제협력기금(EOCF) 아프리카 대상 로보나19...		개발협력과	2020-11-03	12
대외경제협력기금(EO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		개발협력과	2020-10-26	11
출납기 부종과, 제오프기(아비) 국제통화기금(IMF) ...		다자금융과	2020-10-21	41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다자금융과	2020-10-14	11
가미부 녹색기후기금,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중...		녹색기후기획과	2020-09-17	18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녹색기후기획과	2020-08-22	11
[보도자료] '20.6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다자금융과	2020-06-24	8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노인일자리’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언급량 상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연관키워드로는 ‘노인층’, ‘지원사업’, ‘취업자’ 등이 도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노후가 편안한 나라를 이뤄가는 재정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노인일자리



연관어

노인층

지원사업

취업자

정부

어르신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재정

근로자

고용

감소

뉴딜

시니어

고용지표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812만 5천명으로 총 인구의 15.7%를 차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의 비중은 총 인구의 22.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중은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9.6%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2016년 이후 은퇴연령층의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되고 있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¹은 2018년 43.4%로 2016년 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²는 0.41(2016년 대비 0.02%p 감소), 소득 5분위 배율³은 7.94배(2016년 대비 1.11배 감소)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

(단위: %, 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대적 빈곤율	47.8	47.0	47.7	46.0	44.3	45.0	44.0	43.4
지니계수	0.46	0.46	0.45	0.45	0.43	0.43	0.42	0.41
소득 5분위 배율	11.43	11.48	11.23	10.73	9.27	9.05	8.82	7.94

자료: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고령층의 일자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하였다. 실업자 수도 2019년 23만 5천명에서 2020년 31만 4천명으로 약 8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노인복지 재정사업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의 노인복지 목표는 노인층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이다. 이를 위해 △소득 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노인복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노인장비요양보험 사업운영의 예산 규모가 20% 이상 크게 늘었다.

¹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로 빈곤가구 규모를 의미한다.

²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³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이 지표가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주요 예산

(단위: 억원, %)

주요 사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15	13,152	9.5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4,185	17,107	2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	4,183	12.2

주: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은 최종예산, 2021년은 본예산
 자료: 열린재정(2020), 「2020년 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 2,015억원과 1조 3,152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6세 이상)의 노년층에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는 노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예컨대,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노년층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일자리에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공익활동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27만원, 재능나눔활동은 월 10시간 이내 활동 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년층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사업이다.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노년층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0개월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월 71만원 수준이다.

셋째,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이 있다. 대부분 민간형 일자리는 소규모 매장, 아파트 택배,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과 같은 근로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무기간, 시간, 급여 등은 다른 일자리 유형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검색 및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정부는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올해보다 20.6% 늘어난 1조 7,10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가사 지원,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이다.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

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첫째,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된다. 장기요양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둘째,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세대의 재정, 신체적 부담을 줄여준다. 수급자는 비용의 15%만 부담하여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1년 4,183억원, 2020년 대비 12.2% 증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6개⁴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 개편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노인층의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안전지원 서비스는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를 점검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참여는 노인이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문화여가, 평생교육, 체험여행 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를 향상하는 프로그램 제공한다. 셋째, 생활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영양, 보건, 건강운동 교육 등과 같이 신체건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분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일상생활지원은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기존에 있는 재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계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간자원 등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주거위생, 의료연계, 건강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 사회 자원연계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과 클라우드소싱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정부의 뉴딜정책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이 코너는 데이터 뉴딜과 관련한 모든 소식, 즉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합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경제부흥을 이끌었듯이, 한국재정정보원은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꿉니다.

“클라우드소싱은 클라우드(Crowd, 대중)와 아웃소싱(Out-sourcing)이 조합된 말로, 일반 대중을 이용해 기업 내부 고용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중의 남는 힘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클라우드소싱의 정의이다. 이 클라우드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클라우드워커라고 한다.

디지털 뉴딜과 클라우드소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클라우드소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호의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그 속의 데이터 라벨링」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일을 해주는 사람(클라우드워커)들을 모아주는 것을 클라우드소싱이라고 보면 된다. 데이터 라벨러도 클라우드소싱을 통해 작업을 하면 클라우드워커가 되는 것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디지털 뉴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모든 과제에 전면적으로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적용했다. AI허브(www.aihub.or.kr)는 다양한 AI 정보(AI데이터, 소프트웨어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클라우드소싱 일자리 정보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클라우드소싱 방식은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 선정에도 가산점(1점)을 제공할 정도로 유효성을 지닌다.

예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클라우드소싱에 대해 알아보자.



AI허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AI 통합 플랫폼이다.

2017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자원, 소재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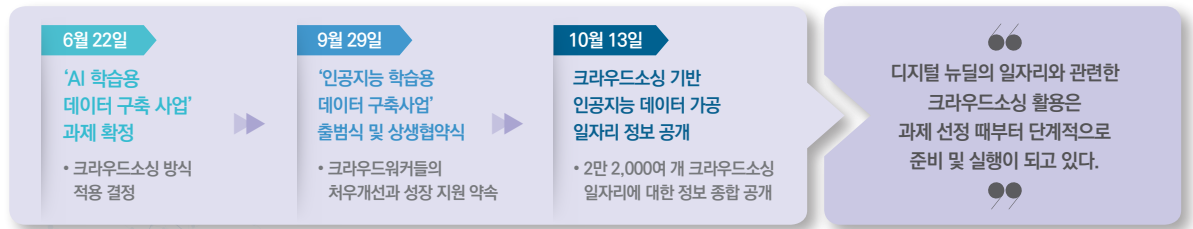
수요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출처: 위키백과



디지털 뉴딜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올해 모든 과제에 전면적으로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적용하며 AI허브(www.aihub.or.kr)에서는 클라우드소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는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매칭한 수요기업은 선정 평가에서 1점 내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부가 이렇게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데 있어 클라우드소싱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인 효과와 동시에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클라우드소싱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한 대만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뉴딜에서의 클라우드소싱이 단순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일자리 창출의 가치만 지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기에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가치가 추가된다.

균등한 기회 제공은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소년소녀가정 등)도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 데이터 라벨링은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도 많아 진입장벽도 낮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클라우드소싱 업체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 「클라우드소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 댐' 구축에 나서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51&bbsSeqNo=94&nttSeqNo=2937329&searchOpt=ALL&searchTx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만 2,000여 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일자리 정보 '한 눈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723>
- 데이터 바우처 공식 블로그 [AI데이터 가공 바우처 A to Z](2020). '디지털 뉴딜' 시대 이끌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의 주인공 돼볼까?
<https://blog.naver.com/datavoucher/222038122659>

균형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 정책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계기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해

문화 혁신과 정책의 당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오동훈 사무관, 청소년정책과 정은 사무관을 만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2020년에는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목표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 지원과 청소년 복지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위기청소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정책을 종합·총괄하여 담당하며,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청소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현재를 즐길 수 있고, 미래를 열며,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Interview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오 동 훈

사무관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국제교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는 35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매년 10개국 청소년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을 고려하여 온택트(온라인+언택트) 방식으로 일본과 브루나이 2개국과 교류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과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단을 파견하고 있지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거나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과 오동훈 사무관은 ‘청소년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담당을 맡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국제적 감각,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나라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청소년국제교류’ 신청절차 및 방법 〉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안내

국외 파견

- ✓ 국가간 청소년교류
- ✓ “꿈과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모집기간	연중
대상	만15~24세
활동시기	4~11월 중(10일 내외)

*사업별 상이

국내 교류

- ✓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모집기간	5~11월(대학별 상이)
대상	만19세 ~ 24세(대학별 상이)
활동시기	6~11월(대학별 상이)

더 자세한 모집 일정이 궁금하다면?

- ✓ 참가신청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접속

.....▶

온라인 참가신청
- ✓ 모집 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카카오톡에서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추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www.youth.go.kr/iye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국제교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온택트 방식으로 ‘청소년국제교류’를 진행해 지리적 경계를 허물었고, 온라인으로 공동주제를 선정하여 교류했다. 국제교류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온택트 국제교류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20일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맺은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에도 국제교류 협력이 들어있다.

오동훈 사무관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을 때 현장방문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선정해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견학하게 한다면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앞서가는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또한 진솔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

는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의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 주요 협력 분야

◎ 청소년 재정역량 강화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청소년특별회의,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 국립청소년수련원, 방과 후 아카데미) 등에 재정배움 콘텐츠 지원
- 청소년 재정교육을 위한 지도자 직무교육 지원

◎ 청소년 분야 협력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와 국민참여예산제의 연계 강화
- 청소년박람회 등 유관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재정 분야 및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재정역량을 키우는 ‘청소년 참여활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정책의 바탕이 되는 청소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청소년 정책 총괄을 담당한다.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 중, 청소년정책과 정은 사무관은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요구가 확대되었고,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¹와 함께 청소년들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범청소년계 여론을 통해 ‘청소년특별회의’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또한 지역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전국적으로 233개가 운영되고 있다(2020년 기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책결과와 청소년 참여 촉진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에 UN 공공행정상(UN PSA)을 수상했다.

“청소년 시기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소년과 국민 모두가 국가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죠.”

¹ UN아동권리협약(1989년) 제12조제1항: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Interview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정은
사무관

정은 사무관은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는 등 청소년들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청소년들의 재정역량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논의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재정 관련 특강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법적 기구다. 전국단위의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당연직)과, 모집된 청소년(선발직) 위원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전국단위의 회의와 지역단위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연도에 정해진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소년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정책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 ‘열린재정’에서 재정용어 해설, 재정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이번 두



**‘청소년특별회의’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보는 것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보는 것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졌다. 정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에 재정교육이 추가되어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할 때 재정 부분도 고려한 종합적인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재정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계획될 예정이다. 12월 10~12일 부산 벡스코와 온라인에서 함께 진행된 2020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국가재정 프로그램을 운용

하여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아직 시행 초반이지만, 청소년 재정역량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국가와 스스로의 재정상황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때 예산을 함께 고민해보며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은 사무관의 기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재정역량이란 재정 즉 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인데 그동안 이런 역량을 높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재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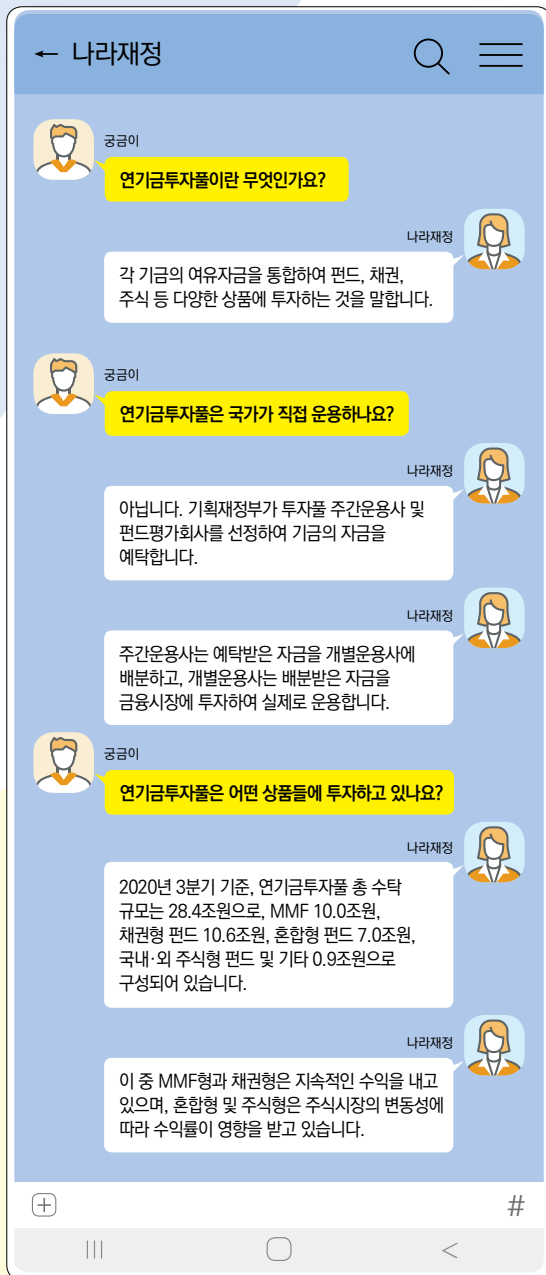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단위의 청소년 참여 기구

- **위원구성:**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당연직) 및 청소년을 모집(선발직)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활동내용:**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
- **정책과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열람 간소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공모전 실시,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15년간 5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 중 461개 과제가 수용되어 정부정책으로 추진
- **관련 링크:**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ywwith/index.do>
청소년특별회의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withyouth>

연기금투자폴이란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Talk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여 투자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분산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국가도 기금 여유자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기금투자폴’이라 부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기금투자폴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가 매월 월급을 받아 그달의 지출을 완료하고 나면 때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곤 합니다. 이 여유자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지만, 펀드나 채권, 주식에 투자하여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기금 여유자금¹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국가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각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연기금투자폴’ 제도라고 부르며,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²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66개의 기금에서 약 785.9조의 여유자금 중 20.6조원(여유자금 중 2.6%)을 연기금투자폴

에 예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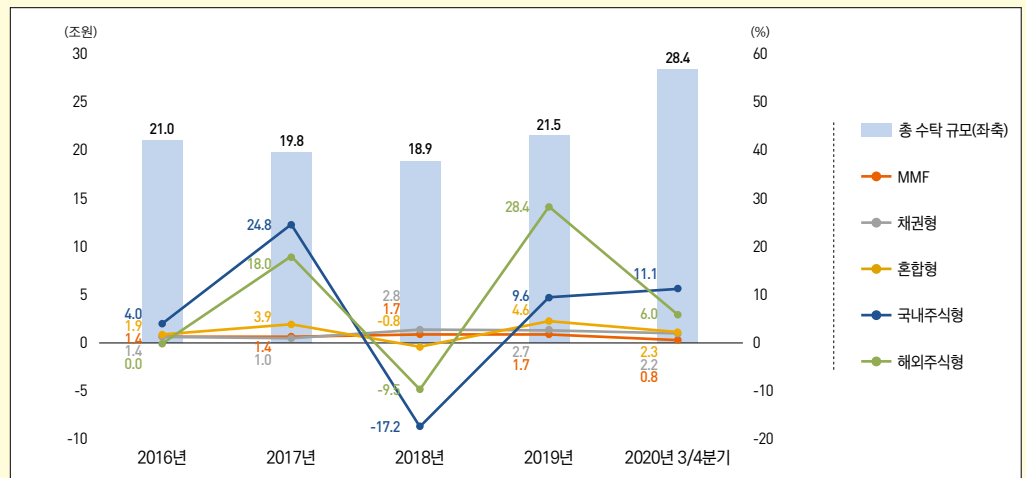
연기금투자자는 상위펀드(통합펀드)에서 하위펀드(개별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Fund of Fund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플 운영기관은 투자플 내 펀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주간운용사 및 펀드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 개별운용사 등 그 외 기관은 주간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주간운용사는 기금에서 자금을 예탁받아 개별운용사에 자금을 배분하고 기금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운용사는 배분받은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실제 운용하게 됩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연기금투자플 총 수탁 규모는 28.4조원으로, MMF 10.0조원, 채권형펀드 10.6조원,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7.0조원,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기타 0.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 규모는 기금 여유자금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증가 추세이며, 채권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채권형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의 경우 MMF형과 채권형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달성 중이며, 혼합형 및 주식형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투자플 수탁 규모 및 수익률 추이

(단위: 조원, %)



주: 2019년까지 연도별 자료, 2020년은 분기별 자료로 3분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연기금투자플 보고서

- 1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각 기금의 설치 목적, 즉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 자금을 말하며,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과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포함한다.
- 2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관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렘브란트의 야경 야경국가 vs 복지국가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The Night Watch>, 1642, Oil on Canvas, 363 x 437cm, Rijksmuseum, Amsterdam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대표작으로 <야경(The Night Watch)>을 꼽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야경’은 1642년에 그린 작품으로 뛰어난 ‘빛의 화가’라는 별칭에 걸맞게 빛에 의한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다. 사실 야경이라는 제목은 원래 렘브란트가 붙인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목은 그림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렘브란트가 붙인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부대’였다. 당시 네덜란드의 도시에는 시민대라는 일종의 경찰단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위대는 156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 게다가 부대의 출동 장면의 배경은 밤이 아니라 낮이다. 그렇다면 대낮에 출동하는 자경대(自警隊)를 그린 그림이 왜 야경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우선 렘브란트 자신의 독특한 화풍에 기인한다. 그것은 명암의 대비다. 렘브란트 화풍의 특징은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기 위해서 밝게 표현하고, 배경이 되는 주변은 어둡게 채색하는 것이다. 렘브란트가 죽은 후에 이 그림의 소유자들은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스 칠로 덧칠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어둡게 변색되어 마치 밤처럼 보이게 됐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작품은 야경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림의 배경이 원래부터 밤이었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그림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은 복원작업을 하게 된 1975년에 이르러서였다. 복원작업을 하다가 덧칠했던 니스가 벗겨지자 본래의 채색이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훨씬 밝은 색조를 띄고 있었다. 비로소 이 작품의 배경이 밤이 아니라 낮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부대의 출동 장면을 그린 그림의 한 가운데에 한 소녀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소녀 덕분에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의 ‘화승총부대’가 출동하려는 장면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이 소녀의 허리에 매달린 닭의 발톱 때문이었다. 닭의 발톱은 그림을 주문한 화승총부대의 심별이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는 이 부대가 실제로 출동했던 역사적 사실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이 작품은 그 당시 네덜란드에 유행하고 있던 집단초상화로 그려졌다. 이 소녀는 이 그림이 화승총부대의 집단초상화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가공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야경(夜警)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치안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야간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금의 징수로 운영되는 국가가 바로 야경국가이다.



야경(夜警)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치안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야간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금의 징수로 운영되는 국가가 바로 야경국가이다. 이처럼 야경국가는 치안의 유지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가장 주요한 임무이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조세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최소국가의 형태다.

일찍이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정부적인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출현한다고 보았다. 홉스적인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위에 어떠한 외부적 규제나 제약조건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아나키(Anarchy) 상태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무정부 상태의 열악하고 카오스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조직과 일종의 계약관계를 맺게 되며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 후생을 아나키적 상황일 때보다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라는 저서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최소국가의 출현을 정교한 이론체제로 보여주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만 하는데,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방어 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적(私的)인 보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형태의 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한 지역 안에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으며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보호 기업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한 하나의 기업이 출현하게 된다. 이 독점적 조직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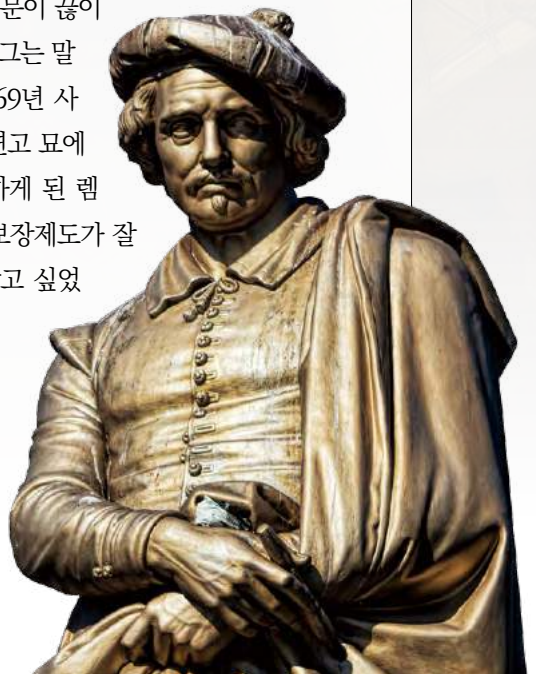
들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서 보호와 강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가 소위 최소국가(Minimal State)라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초기 형태인 야경국가(Night Watch State)는 이 같은 최소국가의 조직에서 진화되었다고 본다.

최소국가에서는 개인적 생산 활동과 재산권은 최대한도로 보장되고, 세금의 부과는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세습을 차단하려는 개혁주의자들 관점에서는 최소국가의 정부 역할은 너무 작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최근 북구의 복지국가들에서 노출된 문제를 보면 국민들의 이상적 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는 막대한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복지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세금부담의 증대는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북구의 여러 나라들이 극복해야 할 어려운 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렘브란트는 평소에 가난과 싸워야 할 만큼 그리 어려운 생활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고 주문이 끊이지 않아 화려한 생활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파산하여 1669년 사망했을 때에는 묘지를 살 돈도 남기지 못해 무연고 묘에 쓸쓸히 묻혔다. 무일푼에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렘브란트의 입장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에서 보다 안락한 임종을 맞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하이에크의 사상 — 자유주의의 수호자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거봐, 내가 뭐랬어!

1989년 11월 어느 날 노쇠한 그러나 아직도 두 눈을 빛을 잃지 않은 90세의 노인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병상에 누어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병상 곁을 의사이자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아들이 지키고 있었다. 아들은 TV를 틀었다. 군중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것 좀 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라고 했다. 지긋이 눈뜨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노인의 한마디. “거봐, 내가 뭐랬어!”

그 노인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誌)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라고 칭송했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겸 사회철학자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였다. 하이에크는 1930년 초부터 줄기차게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

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유럽대륙은 물론 영미 등 지구촌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 경도되었던 시기였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믿는 세상에서 하이에크의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매번 비웃음을 받았다.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했다. 심지어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은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3개월 전까지도 그 체제는 자본주의만큼 번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망한다는 하이에크의 말은 적중했다. 흥미로운 것은 왜 사회주의가 망했는가의 문제다. 그 이유를 하이에크는 지식의 문제에서 찾았다. 정부의 계획당국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이상, 시민 각자의 수요에 관한 생각과 선호하는 것 등 계획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민들에게 각자가 가진 지식을 이용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하이에크의 반사회주의 논리였다.

그는 전지전능한 정부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자유와 시장경제의 존재 이유를 어느 누구보다도 설득력이 있게 제시했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부와 번영을 창출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99~1992)

Friedrich A. Von Hayek

하이에크는 정부가 부와 번영을
창출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시장의 자생적 질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없으면,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시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때에도 하이에크는 시장이 스스로 유지·확장되는 자생적 질서라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그런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지식이 창출되고 성공적인 것이 확산되는 등, 그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는 풍요와 부를 창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은 빈곤, 실업, 불황이나 저성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자생적 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풍요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점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또 그는 대기업의 경제력 문제도 시장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사

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로 인한 빈곤, 실업, 저성장 등도 정부 개입의 탓이라고 했다. 하이에크는 청소년기까지는 심정적 사회주의자였지만, 은사인 미제스를 통해서 확고한 자유주의자가 된 후 1930년대 대공황 까지도 국가개입의 탓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경기불황은 신용의 과잉팽창으로 야기된 인위적 붐의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왜곡된 생산구조가 정상화(正常化)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인데, 이때 불황의 해법으로 정부지출이나 규제는 그 과정을 치명적으로 방해한다는 논리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다

20세기 전반 이후 동유럽과 소련을 지배했던 공산주의와 서구를 지배한 케인스주의로 인해 자유와 시장경제는 세상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개인의 자유는 소멸되었다. 하이에크는 인류가 ‘노예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1947년에는 스위스의 호숫가인 몽펠트랭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유주의자들을 불러 이념전쟁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서라도 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이 케인스의 망령과 함께 인류를 빈곤으로 몰아갔다.

이때쯤에는 하이에크도 이념전쟁(Ideas War)에 지치고, 나이도 들어서 세상은 그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고향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온 노(老)학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세상이 야속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그 무렵에 놀라운 행운이 따랐다. 하이에크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발되었던 것이다. 우울증이 갑자기 사라지고 생기도 되찾았다. 그 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케인스주의가 엉망으로 만든 이 세상을 구할 자를 찾고 있었다. 세계의 눈은 하이에크에게로 쏠렸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그를 등에 업고 혁명을 이루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규제를 혁파하고 조세부담을 줄였다. 정부의 돈줄도 묶었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번영을 불러왔다. 물가도 잡혔고 고용과 소득도 급증했다. 하이에크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방도를 찾던 텅샤오핑도 그를 불러서 한 수 배웠다. 그 후 중국은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허용한 지 3년도 안 되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인류가 하이에크를 만난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열린재정」 활용 논문 공모전 당선작 소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공식 통계플랫폼이다. 예산, 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가 생산한 160여 종의 재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지방 및 교육재정 통계, OECD·IMF의 국제통계, 한국은행·통계청의 경제통계 등도 끌어와 함께 제공한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인포그 래픽으로 시각화하고, 활용하기 쉽게 Open API 형식으로도 서비스 한다. 재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에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 정 데이터 댐’인 셈이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 주 최한 올해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는, 「예산 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서울대 안중기)」이 우수상을,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연세대 장유미, 강원대 김영록)」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심사과정에서 접근방법의 차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결론의 타당성 여부는 조심스럽다. 논문 원문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





「예산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요약

1. 연구 필요성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시간과 정보의 함수이다. 시간과 정보가 충분하면 합리적인 예산결정이 가능해, 불용액도 낮출 것이다. 국회에 더 많은 심의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일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집행기간의 길고 짧음과 불용액의 상관관계는? 아쉽게도 선행연구가 없다. 집행기간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확정일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들쭉날쭉하다. 집행기간이 길면, 즉 연초에 추경이 편성돼 사업 준비 기간이 충분하면 불용액이 작을까? 반대로 하반기에 편성되면 불용액이 커질까? 아니면, 집행기간이 길어지면 집행여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불용액이 오히려 커질까? 이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2. 연구 설계

「열린재정」에서 2007~2018년까지 총 7번의 추경을 대상으로 집행기간(추경 확정일~12월 31일)과 불용률(불용액/세출예산현액)을 추출했다. 불용액 정보는 세부사업 단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했고, 일반·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은 단위사업을 식별할 수 없어 제외했다. 불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증가율, 전년도 불용률 등을 통제변수로 상정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해에는 정부가 집행을 독려하지 않는다는

표 1. 표본선정 및 연구모형 요약

구분	내용
표본선정	-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제외) - 분석단위: 단위사업 635개(표본크기 913개) - 시간범위: 2007~2018년 추가경정예산(총 7회)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 자료추출: 2020년 3월 12일, 2020년 3월 23일
연구모형	$\text{불용액 비율} = \beta_0 + \beta_1 + \log(\text{예산집행기간}) + \sum_{j=2}^k \beta_j \times \text{통제변수}_j + e$

점에서 성장률을, 인건비·물건비보다 예비비의 불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성질별 분류도 각각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3. 분석 결과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년도 예산의 확대, 예산집행기간의 연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사결정은 단기의사결정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예산집행기간이 길어지면 예측오차(불용액)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간이 늘어나면 거시적 불확실성이든 자연재해든 새로운 민원 발생이든 불확실성이 커진다. 결국 예측이 어려울수록 오차(불용액)도 커진 셈이다. 불용액 축소라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산심의기간은 길게, 예산집행기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장려상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요약

1. 연구 필요성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정부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의 원조다.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선을 목적으로 무조건 따고보는 ‘보조금 획득의 정치(Pork Barrel Politics)’

가 작동할 소지가 크다. 지방교부세와 달리 자원배분 기준과 과정의 불투명성이 늘 지적돼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 예산심의위원들의 관계(Network)가 국고보조금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관계요인을 분석했다.

2. 연구 특성

관계분석에는 사회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을 활용했다. 국고보조금 배분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종류로는 정당, 지역구,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4가지를 설정했다. 정당은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도와야 하고,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재선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은 선거에서 매우 긴요하고, 지배적인 학연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집단이 확보한 의사결정 자원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추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사회연결망 분석(SNA) 분석단위

연결망	분석대상	분석지표	분석단위
준 연결망 (Quasi-network)	중심성 (Centrality)	인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국고보조금 예산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영향력

3. 분석 결과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네트워크, 즉 정당과 지역구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출신대학이 국고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했다. 즉,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대학 출신인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많을수록 단체장의 인접중심성이 높아지며, 예산심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연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원의 집중과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의 단계, 즉 해당 상임위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2018년도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도입한 사전적격성심사의 영향요인도 통제변수에서 빠졌다.



Financial Calendar

12月

December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January

01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August

08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0

□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11.19.)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 가계지출은 398만 9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26만 1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3.2% 증가), 흑자액은 131만 6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15.3% 증가)으로 나타남

□ 2020년 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11.19.)

- 2020년 3/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5,110불로 전분기 대비 79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9,724억불로 전분기 대비 195억불 증가하여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614억불로 전분기 대비 116억불 증가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OECD, 12.1.)

- OECD는 20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등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세계경제는 2020년 -4.2%(9월 전망 대비 +0.3%p), 2021년 4.2%(9월 전망 대비 -0.8%p), 2022년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경우, 2020년 성장률을 -1.1%(9월 전망 대비 -0.1%p)로 전망하며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2021년 2.8%, 2022년 3.4% 성장 전망)

□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정부, 12.2.)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하여 내년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전년 대비 +45.7조원),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한 482.6조원(전년 대비 +0.8조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7%(정부안 대비 -0.1%p), 국가채무는 GDP 대비 47.3%(정부안 대비 +0.2%p)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4개 은행과 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주요 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의 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약 플랫폼 'e나라 도움뱅크'를 출범시켰다.

'e나라 도움뱅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3개 지역사무소(대전, 광주, 대구)와 4개 은행의 234개 교육장 및 3,548개 은행 영업점을 연계한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맞춤형 플랫폼으로써, e나라도움 이용을 어려워하는 전국의 정보 취약계층이 거주지 인근의 은행 교육장 등에서 사용자 교육 및 업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낙도·격오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휘경중학교에 재정 특강

한국재정정보원은 중학교 수업과정이 모두 끝나 예비교생 상태인 서울 휘경중학교(교장 이정근)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6~27일 '나라살림 특강'을 실시했다. 재정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수업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 콘텐츠마저 없어, 학교에서의 재정특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특강은, 정보원이 최근 시범제작한 「청소년 재정배움 온라인 콘텐츠」를 교재로 4교시에 걸쳐 진행됐다.

이 콘텐츠는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국가재정통계포털 「열린재정」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정보원이 만들었으며, 현직 사회과 교사 및 관련 교수들의 감수를 거쳐, 이날 처음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이날 특강 내용은 △나라살림 △정부 역할 △세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참여예산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재정정보원은 콘텐츠를 최종 보완·확정하는 대로 교재 및 교안을 무료로 공개해 방과 후 프로그램 △자율학년제 △정기수업을 끝낸 중3·고3 교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여성가족부와 지난달 MOU를 맺었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12. 23. ~ 2021. 1. 14.

문 제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POSTCARD



11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이전지출

☆ 상품 당첨자

kim*****@daum.net
clu**@naver.com
dre*****@naver.com
sps*****@nate.com
ch9**@outlook.com
gnp***@gmail.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달의 재정이야기’가 가장 눈길을 끌었어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재정에는 문외한인 저에게도 쉽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에 응원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sps*****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